

# 오는 10월부터 '영어유치원·7세 고시' 레벨테스트 막힌다

교육부, 유아 대상 모집·반 배정 시험·평가 행위 구체화 입법예고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 금지



교육부.

오는 10월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입학시험이나 수준별 반배정 시험이 금지된다. 필기시험뿐 아니라 구술·면접·실기,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외부 성적표 활용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학원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안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 행위를 구체화했다.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의 학습능력이나 선행학습 정도를 확인하기 위

해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없다.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수행형 평가도 금지된다. 외부 기관이나 다른 학원에서 실시한 시험·평가 결과, 성적표, 등급표, 이수증, 수료증, 합격증 등을 요구하거

나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의 선발·분반 테스트 관행을 겨냥한 조치다. 학원들이 입학 전 아이의 영어 수준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실시해 온 레벨테스트나 면접,

발표, 과제 수행 등이 모집 또는 수준별 반 배정 목적이라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영어유치원 입학 과정에서 이뤄지던 유아 대상 평가 관행은 오는 10월부터 상당 부분 제한될 전망이다.

초등 영어학원 입학을 앞둔 7세 유아들이 치르는 이른바 '7세 고시'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7세 고시는 통상 초등학교 입학 전인 10~12월 영어학원 등록 과정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개정 학원법 시행일이 10월 1일인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유아 대상 입학·분반 목적 레벨테스트는 금지 대상이 된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는 이번 규제의 직접 대상은 아니다.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뒤, 놀이·활동 참여 과정에 대한 관찰, 대화, 상담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다.

이 경우에도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학원 등은 진단의 목적, 내용, 절차, 결과 제공 방식,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단 결과를 점수, 등급, 순위,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모집·선발이나 분반 목적의 평가와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상담을 구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재 기준도 신설된다.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개정 학원법 시행령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 고졸 취업 역량, '직업공통능력'으로 인증

교육부, 직업계고 3학년 5.8만명에 '직업공통능력 인증진단' 실시  
체계 강화해 교육·채용 현장서 활용

교육부가 전국 직업계고 3학년 학생 약 5만8000명을 대상으로 '직업공통능력 인증진단'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기존 '직업기초능력 인증' 명칭을 바꾸고,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생에게 디지털배지와 실물배지를 제공하는 등 직업계고 학생의 역량 인증 활용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7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직업계고 569개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공통능력 인증진단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7일부터 9일까지 학교별로 진단이 진행되며, 10일은 미응시 학생을 위한 예비일로 운영된다.

이번 진단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운영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학생들은 학교에 지정된 PC를 활용해 인터넷 기반 평가시스템으로 응시한다.

평가 영역은 직업인에게 필요한 공통 핵심역량 중심으로 구성됐다. 의사소통국어, 의사소통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능력 등 5개 영역에서 총 342문항을 평가한다. 문항은 직무 상황과 실무 맥락을 반영해 학생들의 직업역량을 진단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교육부는 인증 결과가 학생 개인의 역량 진단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채용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응시 학생에게는 결과에 따라 디지털배지를 수여하고, 올해부터는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학생에게 실물배지도 함께 제공한다.

인증진단 결과는 직업교육 연구에도 활용된다. 교육부는 인증 자료를 비식별 처리해 연구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직업계고 학생의 역량 특성 분석, 교육과정 개선, 직업교육 정책 효과 분석 등에 활용된다. 자료는 교육 데이터 안심구역에 통해 관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업공통능력 인증이 학생에게는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는 지표가 되고, 기업에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역량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활용도를 높여가겠다"며 "진단 결과가 학교 교육과정 개선과 학생 취업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순천향대, AI 세무·회계 창업대회 '대상'

회계학과 학생 구성 'C&C' 팀  
'메디게이지' 플랫폼 출품

순천향대학교(총장 송병국) 회계학과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무·회계 창업 아이디어로 전국 대학생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순천향대는 회계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C&C(Code&Cost)'팀이 지난 4일 목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세무회계학회 제59차 하계학술대회 중 진행된 '2026 AI활용 세무·회계 문제해결형 창업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상으로 수여됐다.

순천향대 C&C팀은 '메디게이지(Medi Gauge)' 플랫폼을 출품했다. 이 플랫폼은 의료기관의 재무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병원 간 상대 비교를 통해 경영 상황을 진단하는 서비스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병원의 지속가능성과 경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순천향대는 이번 수상이 회계학적 사고

/이현진 기자



순천향대 회계학과 C&C팀이 지난 4일 목원대학교에서 열린 '2026 AI활용 세무·회계 문제해결형 창업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김태식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김우석·박민수 순천향대 학생, 장광희 한국세무회계학회 회장. /순천향대

와 AI 기술을 결합해 실제 창업 아이디어로 발전시킨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AI의료융합이 의학·공학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회계·경영 등 비의료 분야와 결합해 지역 혁신과 창업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본격화

전담 TF 전문성·집행력 강화

경기도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공공기관인 '가칭'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투자공사 설립을 지원할 전담 조직인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추진 TF'를 구성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TF는 단장을 중심으로 총괄반과 펀드 설립반 등 2개 반, 10명 규모로 구성됐다. 설립 초기 2~3개월 동안 투자공사 설립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행정절차에 착수한 뒤, 향후 조직개편 시 전문성과 집행력을 강화한 '단(團)' 체제로 확대·개편할 계획

이다.

전담 TF는 공청회 개최와 법인 설립 등 투자공사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총괄한다. 아울러 공사의 핵심 재원이 될 정책펀드 구조를 설계하고, 민간자본 유치와 시군 협업을 통한 재원 조달, AI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방안 마련도 담당한다.

경기미래투자공사는 관리·운영기관인 공사와 투자자산인 투자펀드를 분리하는 이원화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격적 자금을 기반으로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사업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한 자(子)펀드를 구성한 뒤 실제 운용은 민간 전문기관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AI, 반도체, 로보틱스 등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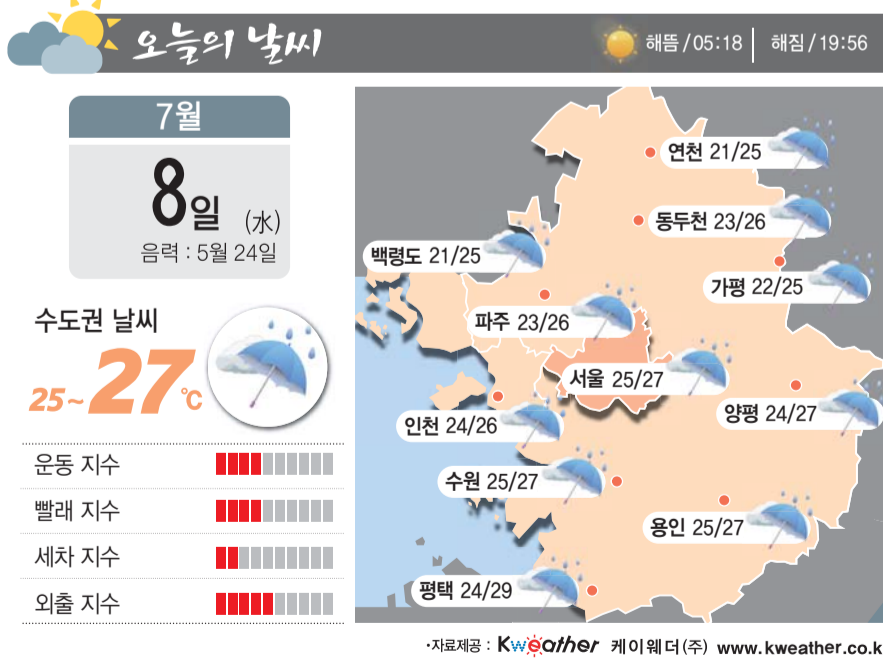
래 전략산업 육성을 비롯해 전력 등 산업 인프라 구축,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 반도체 산업 종사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 등 지역 맞춤형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또 대기업 투자 심사 과정에서는 인재 양성과 지역 상생 방안 등을 반영하고, 화성·평택·이천 등 반도체 산업 거점 시군과 협력해 반도체 산업 성과가 전략산업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재원 확보에도 힘쓸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관계기관 협의와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타당성 검토, 설립 심의, 조례 제정 등 절차를 거쳐 2027년 하반기 법인 설립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추미에 경기도지사는 "기금과 같은 단기적인 방식만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어렵다"며 "투자공사와 같은 견고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메트로 한줄뉴스



- ▲NATO 가는 트럼프...유럽, '돌발 변수' 촉각 /사진 뉴시스
- ▲中 SLBM 발사에 日 "안보 환경 더 심각해져..." 안보 3문서 개정예 속

- ▲中, 대만 동쪽 필리핀해 조사... '잠수함 작전' 전 초전?
- ▲해외 에볼라 확산... 질병청 "입국자 감시 강화"

- ▲쿠바 전국 정전으로 또 암흑시대...비축연료 바닥, 전력망도 훼손
- ▲"호르무즈 해협 인근서 유조선 정체불명 발사체에 피격...화재 발생"